

NEWS LETTER

2026-06-30

Legal Issue

- 디지털 설계의 과실: 메타·구글 판결 이후 기술 기업의 생존 전략
-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과 기업의 법적 책임

MINWHO News

- 양진영 대표변호사, 공공기관 대상 SW 저작권 및 AI 법률 강연 진행
- 양진영 대표변호사,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Business CASE



Legal Issue

디지털 설계의 과실:메타·구글 판결 이후 기술 기업의 생존 전략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내린 판결은 기술 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번 재판은 20세 여성인 원고(케일리 G. M.)가 미성년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 끊임없는 알림 등 중독적인 설계로 인해 심각한 신체 이형증, 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배심원단은 메타에 420만달러(약 63억5000만원), 구글에 180만달러(약 27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판결의 핵심은 두 회사가 애플리케이션(앱) 설계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 있었으며, 서비스의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단순한 콘텐츠 중개자가 아니라, 설계 자체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제조물'이 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한 사례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대목은 기업이 스스로 수행한 '안전 연구'가 오히려 기업을 공격하는 스모킹 건이 되었다는 점이다. 배심원들은 메타의 임원 이메일과 내부 연구 문서를 꼼꼼히 검토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내 10대들의 유해한 경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거나, 소셜 미디어 사용 중단 시 정신 건강이 개선된다는 연구를 경영진이 중단시켰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기업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한 연구가 훗날 "위험을 알고도 제품을 출시했다"는 비도덕성을 증명하는 유죄의 증거로 돌변한 것이다.

이 판결은 1990년대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의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했다가 몰락했던 '빅 타바코 모먼트(Big Tobacco Moment)'에 비유되며, 향후 인공지능(AI) 업계에도 동일한 법적 리스크가 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AI와 플랫폼 기업들은 단순히 '혁신의 속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방어적 연구'에서 '객관적 검증'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내부의 폐쇄적인 연구는 소송에서 독이 될 수 있다. 이제 기업은 안전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거나, 제3자 외부 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안전 감사' 체계를 정례화해야 한다. "우리는 몰랐다"는 항변 대신 "우리는 객관적인 외부 표준에 따라 위험을 관리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효적인 방어책이다.

둘째, '설계에 의한 안전'을 경영의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가 아닌 '설계 방식'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등)에 책임을 물었다. AI 기업들 역시 챗봇이 사용자에게 아부하거나 중독을 유도하는 성향을 주입하지 않았는지 개발 단계부터 법무·윤리팀이 밀착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차등화된 엄격한 보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의의 안전 연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결함을 찾고 수정하려는 노력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된다면, 어떤 기업도 안전 연구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면밀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메타와 구글에 대한 이번 판결은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 생각한다. AI라는 더 강력한 기술의 파고 앞에서, 기업들은 위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역량을 투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규제'가 아닌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기회로 삼는 기업만이, 다가올 사회적 책임의 파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과 기업의 법적 책임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할 때 겪는 정보 접근성 제약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바로 온라인 쇼핑물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 이미지 등 비텍스트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명확히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이다.

본 사건의 원고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로, 대형 온라인 쇼핑물을 운영하는 피고가 상품 정보나 광고 이미지 등에 대해 음성으로 읽어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쇼핑물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정 조치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사기업인 온라인 쇼핑물 운영자가 국가기관 수준의 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지는지 여부. 셋째, 차별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다.

대법원은 우선 특정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과 동시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제2호)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형식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웹사이트를 제공했더라도,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대체 텍스트를 누락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기업의 의무 수준이다. 대법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이 국가기관에 대해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기업 역시 국가표준인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을 준용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이로써 대체 텍스트 제공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에게 6개월 이내에 화면낭독기를 통해 인식 가능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 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간의 노력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장애인의 '디지털 생존권'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간 모호했던 '정당한 편의'의 범위를 국가표준 지침과 연계하여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향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웹 접근성 표준 준수의 일상화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웹사이트 설계 단계부터 대체 텍스트 등 접근성 요소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 등)나 '고의·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있다. 따라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외부 컨설팅 수행, 단계적 개선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는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당장의 재정적 부담이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디지털 포용을 전제로 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MINWHO NEWS

양진영 대표변호사, 공공기관 대상 SW 저작권 및 AI 법률 강연 진행

양진영 대표변호사, 공공기관 대상 SW 저작권 및 AI 법률 강연 진행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26 SW 저작권 및 AI 그리고 보안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IT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AI 관련 법률 이슈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오렌지테크가 주최하고 한글과컴퓨터, 팔로알토네트웍스, 지란지교데이터, 에코아이티, TCEN PNS가 후원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공지능 기술, 정보보안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는 공공기관 IT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날 첫 번째 세션을 맡아 'SW 저작권의 주요 법적 쟁점과 분쟁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AI 생성 결과물의 권리관계와 저작물 인정 범위, 개발 방식에 따른 저작권 귀속 문제,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권리 주체 판단 기준 등을 설명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실제 위반 사례를 통해 라이선스 관리의 중요성을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 절차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과 실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 강연과 질의응답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강연은 공공기관 IT 실무자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AI 관련 법률 쟁점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MINWHO NEWS

양진영 대표변호사,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양진영 대표변호사,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변호사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신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기구로, 법률·정보통신·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사실관계 조사,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서비스 품질, 개인정보, 플랫폼 및 앱마켓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까지 다루며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전문가와 소비자 분야 전문가,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져 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통신 서비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정보통신,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및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고,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주요 업무사례

1.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 - 서비스 방식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항소 전부 기각 판결
2. 계약분쟁 - 위탁보관계약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대리,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인 승소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고소 - 분양대행 과정 민감정보 무단 수집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4.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 - 검색광고 키워드 무단 사용 사건의 원고 대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인정 받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5.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관련 의뢰인 대리해 합의금 60% 감액 및 원만한 형사절차 종결 이끈 사례
6.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제공 PG사에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세법상 법률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7.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 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 자문 제공
8.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관련)
9.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반론 및 이의 제기 대행 자문 - 저작권 보호 대상, 범위, 침해 성립 등
10.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령에 따른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 체계 적정성 및 향후 대응 관련 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주요 업무사례 바로가기]



[전화 상담 바로가기]



[카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상담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